

中央人事委員會

中央人事委員會

1. 總 括

지시사항 건수		완 료	관리종결	추진중		미 착 수	비 고
				정 상	부 진		
총 계	11	5	-	6	-	-	-
단독주관사항	7	1	-	6	-	-	-
공동지시사항	4	4	-	-	-	-	-

2. 指示事項 目錄

○ 完了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완료연월일
462	08-09-02	지연·학연 등 정실인사 배제	2001. 4. 7
69	08-70-03	국정홍보 강화	2000. 2.28
304	03-70-32	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	2000. 3.25
366	09-70-39	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	2000.12.31
372	08-70-31	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	2000. 2.28

▲ '98 - '00년 완료사항은 「1998년 -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」 책자 참조요망

○ 管理終結事項 : 해당사항 없음

○ 推進中인 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비 고
338	08-09-01	민·관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	정상
463	08-09-03	과학기술 공무원의 확보·활용	"
464	08-09-04	여성·장애인 공직진출 확대	"
465	08-09-05	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·활용	"
467	08-09-07	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	"
487	08-36-35	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	467과 통합
396	08-70-47	공무원인사제도 개혁	정상

3. 完了指示事項

1) 地緣・學緣 등 情實人事 排除 : 462(08-09-02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13일,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)

- 지연, 학연, 친소관계 등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
- 한 사람의 청탁 때문에 전체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인사문제의 가장 큰 폐단인 청탁을 배제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
-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불공정이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.

나. 措置內容

-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현직자 및 역대 정부의 선호직위 재직자 보직실태 조사(2001.1~2월)
 - 역대 정부의 정무직, 선호직위 재직자와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현직자 보직실태 등
- 공직인사채신대책 발표(2001.3.16)
 - 장·차관 인사시 출신지 교차 임명 고려
 - 각 부처별 선호직위에 대한 특정지역 과다점유 해소 노력
 - 다면평가제, 중앙인사위 인사심사를 통한 실적주의 인사 확립
 - 직무성과급제, 인사행정전담부서 등 신인사제도의 도입
-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(2001.3~4월)
-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각 부처 통보(2001.4.7)
 - 실적주의 인사원칙 구현을 위하여 인사청탁의 배격, 인사심사의 강화, 직위공모제의 활성화
 - 승진·채용·보직관리 분야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확립

다. 事業成果

- 공직내 인사편중 시비는 공직사회의 갈등과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여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역대정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던 민감한 사안이었음
-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서는 국력 소모적인 대립·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직사회의 인사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
- 이를 토대로 국민 대화합과 공정한 인사정착을 위한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였음(2001.4.7)
- 이러한 적극적 조치에 따라 국력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·대립·갈등이 불식되고 공직사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4. 推進中인 指示事項

1) 民・官交流 活性化 方案 마련 : 338(08-09-01)

가. 指示內容(2000년 3월 25일,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)

- 민・관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
 -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공사부문간 이해증진 및 협조강화를 위하여 민・관교류를 실시하되, 성급한 실행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속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민간근무 휴직제 추진방안 수립(2000.5~10월)
 - 휴직허용대상, 휴직기간, 부작용 방지대책
 - 휴직자의 경력·보수 등 인사관리방안 등
 - 한국행정연구원, 행정자치부와 공동추진(용역사업 병행)
- 인사교류 연구용역 보고서 분석(2001.1월)
-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
 - 제7차 인사정책자문회의 상정(2001.2.16)
- 민간경제단체와의 협의 추진(2001.2~3월)
 - 전경련, 중기협 등
 - 공무원 사직후 민간기업 취업자 면담 등
- 민간기업 등의 수요조사 실시(2001.3~4월)
- 민간기업 등의 수요조사 결과 취합·분석(2001.5월)
 - 대기업, 중소기업 등 91개 기업
- 민간근무휴직제 추진방안 실무협의(2001.5~10월)
 - 한국행정연구원, 행자부와 공동추진(용역사업 병행)
- 민간근무휴직제 실시 근거 마련
 -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(2001.3월)
 - 중앙인사위원회 심사(2001.7월)
 - 법제처 심사(2001.10월)
 - 국회 통과(2001.12.20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『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규정』(대통령령) 제정 : 2002년 상반기
- 인사교류센터 및 인사교류심의회 구성 : 2002년 상반기
- 민간근무휴직제 시행 : 2002년 7월 1일부터

2) 科學技術 公務員의 確保・活用 : 463(08-09-03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13일,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)

- 과학기술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핵심이므로 우수한 과학기술 공무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연구용역 계약 체결
 - 계약기간 : 2001.4.4~10.3
 - 용역수행 : 한국공학한림원
- 연구용역 중간발표(2001.6.26)
 - 추진상황 설명
 - 보완사항, 추가검토사항 등 협의
-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(2001.10.4)
 - 전문인력의 확보 및 처우개선
 - 기술고시제도, 특별채용제도 개선
 - 과학기술분야의 병역특례 대상기관을 정부부처로 확대
 - 경력산정의 합리화, 자격수당 신설 등 과학기술인력의 처우개선
 - 인적자원의 개발
 - 공공-민간간의 과학기술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
 - 과학기술 관련 정책업무를 수행할 기술직 및 행정직 고위정책 공무원의 재교육 강화
 - 인사시스템의 재구조화
 - 정부조직의 Dual Career System 도입
 - 연구개발직 신설, 복수직렬제도의 개선
 - 과학기술분야의 직렬신설 및 과학기술 직렬간 교류성 확보
 - 기타
 - 개방형 직위제도 확대, 보직 임기제도 개선
 - 기술직의 명칭 개선,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통합
- 현재 연구결과 분석중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안을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향후 관계기관의 여론 수렴, 현실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추진

3) 女性・障礙人 公職進出 擴大 : 464(08-09-04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13일,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)

- 여성공무원들이 최근 수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간부직 등에서는 아직 부족하므로 해당 전문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
- 장애인들이 신체조건에 맞는 직종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임용·배치시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〈공직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중·장기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〉

- 45개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현황 조사(2001.4~5월)
-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국무회의보고(2001.5.29)
- 관련 부처·단체 관계관회의 (2001.6.4)
-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(2001.9.28)
-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(2001.10.31)
 - 출산휴가기간 연장 : 현행 60일 → 90일('01.11.1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)
 - 육아 휴직수당 신설 등을 위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(2001.11.13)
 - 30일이상 육아휴직시 매월 20만원 지급(01. 11.1부터,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)
 -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(국회본회의 통과: 2001.12.20)
 -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화: 자녀 만1세미만 → 만3세미만
 -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
-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(안)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(2001.12.20.)

〈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〉

-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2001.4~8월)
 - 용역기관 : (사)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
 - ※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(2001.6월)
- 장애인공무원 현황조사 및 분석(2001.4~5월)
-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회의(2001.7.6, 주관: 국무조정실)
 - 참석 : 행정자치부, 산업자원부, 노동부, 보건복지부, 중앙인사위원회
- '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' 검토보고서를 행정자치부(인사과, 고시과), 노동부(장애인 고용과)에 송부하여 조치토록 함(2001.12.31)

다. 向後 推進計劃

〈여성공무원 인사제도 개선〉

- 2002.2월중으로 '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'을 마련하고 2002년 상반기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

〈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〉

-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,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

4) 人事政策支援시스템의 成功的 構築・活用 : 465(08-09-05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13일,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)

-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은 정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전자정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디지털시대 전자정부에 적합한 전자적 인적자원관리(e-HRM) 구현을 목표로 인사정책지원 시스템(PPSS: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) 사업계획 수립과 개발 착수 : 2000년
 - 인사정책 8대 개혁과제로 선정(2000. 2월)
 -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 포함(2000. 3월)
 -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 확정(2000. 7월)
 - 계약체결, 사업착수(2000. 10월)
 - 「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규정」 공포(2000. 12월)
-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발과 시범적용 및 확대적용 준비 : 2001년
 - 공무원 인사전반에 걸친 97개 업무프로세스 분석('01.1~3월)
 - 업무재설계(BPR) 및 시스템 개발('01. 3~7월)
 - 전자정부구현 11대 중점과제에 PPSS사업 포함('01. 5월)
 - 사용자교육, 시스템 보완 및 관련법령 정비('01.8~9월)
 - 프로그램 개발 완료, 시범부처 시스템 적용('01. 9월)
 - 중앙인사위, 기획예산처, 농림부, 농진청 등 4개부처에 시스템 시범적용
 - PPSS 확대적용계획수립 및 실시준비('01.10~12월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2년도에는 우선 35개 중앙행정기관에 PPSS를 확산·보급하고,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말까지 청단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타 헌법기관까지 시스템을 보급하여 전 공무원의 전자적 인사관리 기반을 완성

5) 公務員의 삶의 질 향상 : 467(08-09-07)

가. 指示內容(2001년 2월 13일,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)

-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, 레저, 근무여건 등에 각별히 유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2000년에 기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「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」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우수사례집 발간·배포(2001.4월)
 - 「자체 문화프로그램 운영」(농림부) 등 총 19개 기관 23개 사례 선정
 - 「2001년도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」용역 실시(2001.7~11월)
 - 수행기관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 - 주요연구내용 : 2001년도 기준 공무원의 삶의 질 실태조사 실시
독일,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례 소개
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 방안 도출
 - 2001년도 각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·평가(2001.11월)
 - 평가결과는 2001년도 인사행정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
 - * 농촌진흥청·국세청·경찰청·기상청 등이 우수추진기관으로 평가됨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(계속)
 -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대책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과제별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책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
 - 추진과제별 우수사례를 선정·전파하여 각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과제추진을 유도
 - 2001년도 각 부처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, 각급 기관에 전파
 - 각 부처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연말 “인사행정 우수기관 선정”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
 - ※ “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”(487-08-36-35)은 동 지시사항에 통합 관리중

共通 1) 公務員人事制度 改革 : 396(08-70-47)

가. 指示內容(2000년 10월 16일, 제42회 국무회의시)

- 이번에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외교관의 계급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문성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.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
- 또한 이러한 제도는 다른 부처에도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. 공무원 인사제도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.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‘공무원 보수등급제 도입방안’ 연구용역 실시(2000.4~8월) : 용역기관 - 삼성경제연구소
- 계급구조 개편방안 관련 외국 사례 발표회 실시(2000.5.18)
 -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
- 외교부, 기상청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시범실시(2000.5~12월)
- 직무분석 근거규정 보완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중앙인사위원회 의결(2000.10.18)
-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로 통보(2000.10.24)
- 외무공무원법 개정(2000.12.29)
 - 계급제 폐지, 직위공모제 도입(과장급 이상)
-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의견조회·입법예고
 - 관계부처 의견조회(2000.12.28~2001.1.20)
 - 입법예고(2001.3.27~2001.4.17)
- 행자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 의뢰(2001.6.22)
 - 시간제공무원제 도입 근거 신설, 특별채용제도 합리화
 - * 계급제 예외적용 근거조항 신설 유보
- 외무공무원임용령, 공무원보수규정 개정(2001.6.30)
 - 보수등급제 도입, 직무분석 실시 근거 신설
- 2단계 직무분석 실시(2001.3~12월)
 - 건설교통부, 국세청, 중앙인사위원회
-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제226회 국회본회의 통과(2001.12.20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계급제가 폐지된 후,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 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함

-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직 등에서의 계급제 보완(폐지) 방안 검토